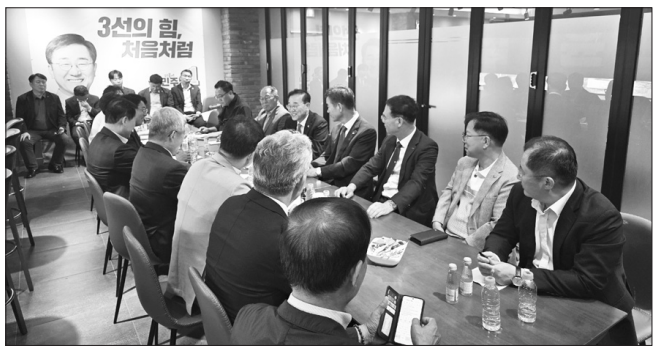
전북 건설업계 현안 공유 · 활성화 방안 논의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 갖고 새만금 투자 지역업체 참여 확대 · 광역교통망 국가계획 반영 촉구



전북 건설단체연합회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 건설단체연합회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 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1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사 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현안을 공유하며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재철 회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고속도로·국가철도망·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전북 주요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개발사업이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연계된 상생형 사업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산업계와의 동반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전북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라며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 숙원사업이 국가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 건설단체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도내 10개 건설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합기구로, 2007년 출범 이후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상생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전북을 스마트 건설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AI 건설·로봇 혁신센터 설립 업무협약' 체결식에도 참석해 미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오상근 기자

여름철 수퇘지 관리, 번식 성적 좌우

농촌진흥청, 폭염 이후 6~8주간 집중 관리 당부

농촌진흥청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수퇘지의 고온 스트레스가 가을철 돼지 번식 성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건강·위생 관리와 정액 보관 관리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여름철 고온 환경이 수퇘지 정액 품질을 떨어뜨려 가을철 임신율(수태율)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돼지 인공수정 성적은 수퇘지의 건강 상태와 영양 수준, 정액 품질, 채취 및 보관 환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특히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는 정자의 운동성과 생존성, 정상 정자 비율을 낮춰 번식 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고온 스트레스의 영향은 즉시 나타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액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폭염 이후 6~8주 동안 정액량과 정자 운동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8월 무더위는 9~10월 수태율 저하와 재발정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수퇘지의 건강 관리도 중요하다. 후보 수퇘지는 생후 6~7개월경 성적으로 성숙하지만 실제 번식 활용은 체형과 정액 상태 등을 확인한 뒤 8개월령 이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나치게 잦은 정액 채취는 정액량과 정자 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어 일정한 채취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정액 채취 과정의 위생관리도 번식 성적 향상에 중요한 요소다. 정액이 세균에 오염되면 정자 운동성과 생존성이 감소하고 어미돼지의 생식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인공수정용 액상 정액은 전용 보관고에서 17~18℃를 유지해 보관해야 한다. 농장에 정액이 도착하면 즉시 전용 보관고에 보관하고, 사용 전에는 색상과 냄새, 침전 여부, 유통기한, 보관 온도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교배사로 이동할 때는 보온 상자를 활용해 급격한 온도 변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상근 기자

전북 상공계 "첨단 방위산업 중심지 도약 기대"

전북자치도 · 전주시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 환영 · 협력 의지 표명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북이 대한민국 첨단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공계는 이번 선정을 전북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탄소소재 산업 경쟁력과 첨단 복합소재 기술,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 새만금 실증 인프라 등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이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 상공계는 앞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경제계 제언'을 통해 '첨단소재 기반 차세대 K-방산 허브 구축'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전북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인 동시에 첨단 제조업과 인공지능(AI), 무인체계 등 미래산업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의 강점인 탄소산업과 미래 방위산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은 물론 지역 기업의 방산시장 진출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공계는 "180만 도민과 함께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힘을 보태겠다"며 "전북이 대한민국 첨단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기관을 향해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조기에 안착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상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서울 성수동에서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성과공유회 열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의 생활 불편을 해결할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한 청년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2일 서울 성수동에서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제안한 3개 청년팀에 장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농촌 소셜창업은 농촌 지역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창업 방식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에는 청년 서포터즈 6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한 달간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10개 군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생활 속 불편과 서비스 공백을 조사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청년들이 발굴한 10개 지역 맞춤형 소셜 비즈니스 모델이 발표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충남 청양의 '으라차차', 전북 장수의 '현장의낙원', '이음과채움' 등 3개 팀이 장관상을 수상했다.

/오상근 기자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 상설화 결정된 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및 상설화 추진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금액 인상과 대상 지역 확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활용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제는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 69곳으로 늘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올해 13조 원 규모로 증가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특세 용도 규정 변경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설화와 지급 금액 상향 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금액, 대상 지역 확대 여부, 농특세 용도 규정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관원, 26일까지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전북농관원)은 6월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2일간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7개 반 15명이 투입되며, 돼지고기와 족발·보쌈 등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가공업체,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표시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외국산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통신판매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를 기재하는 사례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또는 특정 지역 특산물로 허위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오상근 기자